

데스크 칼럼

‘AI특성화대학’ 설립과 광주전남 통합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통상 지방 선거 2개월 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은 더 촉박하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력 감퇴로 나이 갈수록 야위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의 피폐를 막아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지역을 발전시킬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지금도 블랙홀처럼 지방의 인구와 경제력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앞세워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각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권역별로 경제권을 만들려면 기업들이 외야하는데, 기업들은 지방에 기면 필요한 우수 인재를 뽑을 수 없고, 지방에서 뽑아도 수도권 등으로 다 떠나간다고 꺼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역의 대학을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대학처럼 양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권역별로 핵심 전략 산업들이 정해지고 윤곽이 드러나면, 그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그 지역의 대학이 전국에서 탑(Top)이 되게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안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인구 절반, 100대 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광주전남이 당장 풀어야 할 의제를 던진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상생,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 하지만 행정권 약화, 명칭·고용 문제, 지역 정체성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연내 출범키로 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실무협의를 거쳐 쟁점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통과를 보류하고 관련 예

산까지 삐감했다.

광주전남 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당장 내년 6월에 선출되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이를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통합 지방정부 출범 시 임기 단축 등을 지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실행력이 담보된다.

통합된 광주전남의 핵심 전략산업은 인공지능과 에너지가 유력하다. 에너지 전략산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과 나주에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만간 유태 학장을 눈앞에 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반이 마련됐다.

인공지능 전략산업은 광주지역 대학들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와 지역대학이 AI·반도체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고, 내년부터 광주과학기술원에 ‘광주 AI 과학영재학교’가 부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과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과 관련해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참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을 전제로 ‘AI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어떨까. 미래 AI(인공지능)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자는 애기다.

사설

KTX 호남선 증편 기회 놓쳐선 안된다

‘KTX 호남선 증편’에 정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를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비는 KTX-청룡 기관차 두 대 이상을 연결 운행하는 ‘증편’ 편성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경우 기존 KTX-1보다 전력이 약 1.4배 가량 소비돼 안정적인 증편 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23년 8월 KTX-청룡의 증편 시운전 중 전복 정읍시에 있는 노령변전소의 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선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KTX-청룡의 증편 운행이 가능해져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2회 운행 중인 KTX-청룡은 1편성에 515석에서 증편 운행시 1030석으로, 1일 26회인 KTX-신천은 1편성 379석에서 758석으로, 하루 40회인 수서발 고속열차 좌석 편당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나게 돼 KTX 호남선 좌석은 1일 4만8294석에서 최대 7만5578석으로 2만7284석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행중인 이들 기관차들은 사정에 따라 증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증가 좌석은 이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반복되던 ‘표 구하기 전쟁’ 등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민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호남선 KTX 증편을 위해 ‘을인’하다 시피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이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을 수차례 찾아가 KTX 증편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정준호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KTX 호남선 개통 10년만에 KTX-신천 2편이 증편됐고 이번 변전소 개량 사업비 반영으로 KTX-청룡 증편 운행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KTX의 안정적인 증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완도·화순군 지방소멸 대응 ‘돋보이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인구소멸 위험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완도군과 화순군이 최고 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120억 원의 기금을 확보, 발굴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오는 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서면·현장·대면평가 등 3단계 심사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기금을 치는 배분한다.

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사람 중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스마트 허양지수 클러스터, 블루치유 가든조성,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운영 등 ‘치유의 섬 완도프로젝트’ 사업을 접종 발굴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섬 병원 예약선 반값 운임 지원, 스마트 예약터미널 시스템 구축 등 ‘완도 왔닭’ 헬링페스’ 사업 추진도 퍼스스가 됐다.

또 화순군은 ‘사람+산업·일자리 중심 우수사례’다. 부영그룹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매년 임대주택 100호를 월 1만원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시간당 보육료가 1000원인 ‘24세 어린이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백신산업특구 등 산·학·연이 접종된 인프라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백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국가 백신 생산 및 면역 치료 거점 구축’으로 한 점도 한몫했다.

고흥·영암·신안군은 한단계 아래인 S등급에 뽑혀 각각 88억원을, 곡성·강진·진도·보성·영광·해남군은 A등급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기금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담양·장성·함평·장흥·구례군은 가장 낮은 B등급으로 분류돼 72억원을 확보했다.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18곳의 관심지역 평가에서 광주 동구는 A등급으로 분류돼 24억원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이 기금을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쓰겠다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이같은 방침에 맞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길 바란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 회장 |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 차재진 | 사장 | 이승배 | 주필 | 김상훈 | 편집국장 | 최현수 |
|------------------------------|-----|-------------|-----|-------|----------|------------------------------------|----------|------|-----------------------|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 | | | 정 치 부 | 370-7010 | 논 설 실 | 370-7200 | | |
| 우편번호 61234 | | | | 경 제 부 | 370-7020 | 임 원 실 | 370-7000 | | |
| 대표전화 (062) 370-7000 | | | | 사 회 부 | 370-7030 | 총 무 국 | 370-7093 | | |
| 팩스 (062) 385-5400 | | | | 문화체육부 | 370-7234 | 사 업 국 | 370-7070 | | |
| 1995년 12월 12일 창간 | | | | 면 접 부 | 370-7082 | 광 고 국 | 370-7080 | | |
|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 | | | 사 진 부 | 370-7050 | 독자관리국 | | | |
| | | | | | | 서울지사 ☎ 02-978-7090 | | | |
| | | |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취재수첩

고향을 잊는 마음

이현규



정치부 부장

연말이 되면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막상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쉽지 않다.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만든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시행 3년 차, 이제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낯설다.

최근 전남도가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에는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고,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1000여명이 발길을 모았다. 행사장에서 눈에 띈 건 담배제품이나 이벤트 보다 “이 제도가 뭐냐”고 묻는 궁금증이었다. 제도가 생긴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된다.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청년·교육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인다. 지방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지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민이 실제로 제기하지 못하면 참여는 늘지 않는다. 전남도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상담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직접 보고, 듣고, 묻고, 기부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치 경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가 늘어날수록 기부금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 사는 전남 출신들을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삶을 꾸린 이들이 제도의 주요 참여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잊지 않고, 작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제도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다. 전남도의 현장 행사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다. 올 연말,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제도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고향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마음을 내는 순간,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독자투고

긴장에서 공존으로 나아가는 광주

2018년과 2025년, 나는 같은 광주 쥐어문화축제를 두 번 경험했다. 처음은 의무경찰로, 두 번째는 기관대 순경으로. 7년 사이 광주의 분위기와 경찰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2018년 첫 축제의 5·18민주광장은 찬반 집회가 뒤엉킨 채 긴장이 극심했다. 일부 반대자가 행진을 막아 서고 도로에 드리워진 경찰은 춤출한 차단선으로 양측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그때 경찰은 충돌을 ‘억제하는 벽’이었다.

반면 2025년 금남도 죽제는 인권교육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다. 반대 집회는 500m 떨어진 공간에서 진행됐고, 동선도 사전에 분리돼 현장에는 충돌이 없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퍼레이드를 즐겼고 경찰은 흐름을 조율했다.

달라진 것은 경찰의 방식이다. 2018년이 대치·차단 중심이었다면, 2025년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운영으로 진화했다. 의경과 순경으로 두 시기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광주가 긴장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체감했다. 광주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성숙하는 도시로 더 성장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특정 입장에 지지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원칙을 이어갈 것이다.

박상우 광주경찰청 제3기동대원